

보도자료



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

발로 뛰는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m567h@na.go.kr

[2015. 10. 8(목)]

윤명희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 보도자료 -

1.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4년” “농촌은 지금 약취약의 전쟁 중”

- 해양투기 이전 보다 축산분뇨량 8.3% 증가하고 민원과 위반건수 각각 65.1%, 130% 폭증

2.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범행에 고독성 농약 사용 !!

- 고독성 농약 5종류, 10월 말까지 법적으로 유통으로 제2의 범죄 및 인체 환경 유해성 우려
- 정부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대책 마련해야 함

3. 농촌진흥청 비리자에게 성과급 지급, 친인척 계약직 지원 특혜 채용 의혹 !!

-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성매매 및 금품수수 직원 등 징계자에게 최근 5년간 약 1억 6천 5백만원 성과급 지급
-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친·인척 계약직 27명 중 13명 최근 3년간 특혜 채용 의혹

4. 농협 전 계열사 여성 임원 0%,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 비율 9.3%,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 농협경제지주 정규직 여성비율 7.1% !!

- 농협 유리천장 여전해, 농협 여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나서야 함 -

5.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 225억, 63건 일감 몰아줘!!

- 농협 대표이사급 퇴직 후 재취업 근절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법인 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함

붙임1.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4년” “농촌은 지금 악취와의 전쟁 중” !!

- 해양투기 이전 보다 축산분뇨량 8.3% 증가하고
관련 민원과 위반건수 각각 65.1%, 130% 폭증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 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축산분뇨량은 8.3% 증가하고 관련 된 민원은 각각 65.1%, 130% 증가하였다며 축산분뇨 심각성을 지적 함
- 더욱이,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반발로 인해 공동자원화사업 불용액은 오히려 89.3%, 89.3%, 78.6% 늘어 남. 지금 농촌은 악취와의 전쟁 중이라며, 축산분뇨 해결 위한 범정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유사한데 불구하고 이원화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박근혜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6차산업화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민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악취와의 전쟁’을 치러야하는 농촌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임
- 윤명희 국회의원은 “해양투기 이전보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은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해 불용이 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축산분뇨 문제는 축산업의 생존은 물론 농촌의 6차 산업화 성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축산분뇨사업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등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함

붙임2.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범행에 고독성 농약 사용 !!

- 고독성 농약 5종류, 10월 말까지 법적으로 유통으로 제2의 범죄 및 인체 환경 유해성 우려 -
- 정부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대책 마련해야 함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등록 취소 된 고독성 농약 5종류가 합법적으로 유통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회수·폐기 대책을 주문 함
- 실제,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에서 사용한 고독성 농약은 메토밀 액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2014년 10월 말 약효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농가(범인)에서 이를 보관하여 범죄에 사용한 것 임
- 이에,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메토밀 수화제 등 5종류의 고독성 농약은 올 10월 말 약효 보증기간이 만료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중일 뿐만아니라 고독성 농약을 사재기한 농가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전적인 손해와 반납 정보를 몰라 이를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함
- 또한, 고독성 농약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지만, 살포 할 경우 인체는 물론 환경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실제, 국민들은 고독성 농약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 농약이 유통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윤명희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회수 및 폐기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시행 필요가 있다”면서 “농약판매상에 판매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를 하거나 유효 보증기간이 만료되어도 유상 회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함

붙임3.

농촌진흥청 비리자에게 성과급 지급, 친인척 계약직 지원 특혜 채용 의혹 !!

-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성매매 및 금품수수 직원 등 징계자에게

최근 5년간 약 1억 6천 5백만원 성과급 지급 -

-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친·인척 계약직 27명 중 13명 최근 3년간 특혜 채용 의혹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성매매 및 금품수수 직원 등으로 인해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최근 5년간 약 1억6천5백만원 성과급 지급했다며 비리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중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 함
- 징계자들 상당수는 금품수수, 성매매 및 성추행 등 파렴치범으로 들어났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성과급을 이런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지 못함. 더욱이, 정직 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데 12개월치 성과급을 전액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음
- 물론,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 때문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항변하고 있지만, 향후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 비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농촌진흥청의 입장에 윤명희의원은 사전에 제도개선책을 만들었다면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사지 않았겠냐며 더욱 질타 함
-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국정 아젠더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인데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친·인척 계약직 27명 중 최근 3년간 13명 집중 특혜 채용되었다며 의혹을 제기 함. 실제, 농촌진흥청 무기계약직 경쟁율이 20~40대 1인데,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배우자 및 자녀가 집중 채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함
- 이에, 윤명희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무기 계약직 등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다면, 취업준비생이 상대적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자체 감사를 요구 함

붙임4.

**농협 여성 임원 0%,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 비율 9.3%,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 농협경제지주 정규직 여성비율 7.1% !!**

- 농협 유리천장 여전해, 농협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나서야 함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농협 여성 임원 0%,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비율 9.3%,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 농협경제지주 정규직 여성 비율 7.1% 등 농협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함
- 더욱이, 농협 임원은 물론 부장급 간부인 M급도 농협은행 1.5%를 제외하고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하여 0명으로 나타나, 농협 여직원에 대한 홀대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남
- 농촌의 여성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림조합법 개정이 시행되어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1명을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대한 여론은 더욱 큰 상황 임
- 윤명희 국회의원은 “작년 농협 국감에서도 농협 여직원에 대한 홀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농협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아쉽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형평성 있게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회사는 물론 국가에도 이득이 되는 만큼 처우 개선” 촉구 함

붙임5.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
225억 원, 63건 일감 몰아줘!!**

- 농협 대표이사급 퇴직 후 재취업 근절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법인 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함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 22,534백만원, 63건 일감 몰아줘 개탄스럽다며 강력하게 질타 함
- 농협중앙회는 회계법인들과 회계감사·사업·컨설팅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3개 법인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의 계약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 법인들에 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등 농협내에서 각 분야 수장을 담당했던 분들이 각각 해당 법인에 한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 짐
- 대표이사가 재취업한 회계법인과 각종 계약 체결시 농협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해당 법인들을 선택 할 수 밖에 없고 계약도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할 우려가 분명히 클 수 있음. 또한 사업 추진시 공정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임
- 윤명희 국회의원은 “회계법인에서 농협의 대표이사급을 거액을 주고 영입한 것은 누가보아도 회계법인이 농협의 로비(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는 “대표이사급 이상은 퇴직 이후에 농협을 상대로 하여 사업이득을 취하는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농협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함